금남로에서

김동영

경제자유구역 남발 안된다

정부가 11~12월중 경제자유구역을 2~3곳 추가 지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늘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정하려는 정부의 발상을 옳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은 주거·상업·관광·산업단지 등의 복합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다.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세제 감면 등으로 해외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려는 구상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 지켜야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4년 전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부산과 광양 등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이자 해외투자가들의 '투자천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미미하다. 또 일부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해외 유명 연구소나 대학 등 비상업적 기관의 유치 실적은 거의 없다.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인센티브도 약하다.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혜를 확대키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1천만달러 이상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면 광양만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순천, 광양, 여수, 하동이 포함된 광양만권은 부산·진해나 인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에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 포트'로 육성하겠다던 광양항의 물동량이 부산은 물론 인천항에도 뒤떨어질 정도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 원칙에도 어긋난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늘리면 추진력과 집중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등에 수많은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지방이전 대신 중국 각지의 특구에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시장에서 완전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은 '특구 천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지역이 수십 개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이 지정돼 있다.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지정된 지역특구도 80군데나 된다. 선심을 쓰듯 '특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

경제자유구역이 남발되면 희소가치가 떨어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늘려서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과다한 경쟁으로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공멸할 수 있다.

연말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유력시되는 곳은 전북 군산과 충남 평택 등 서해안지역이다. 정부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된 뒤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와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외자유치 전략, 재원조달방안 등도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추가 지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사설

광주 약값 '천차만별' 약국별 가격 공개하라

같은 회사 약품인데도 약국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약품에 따라서는 최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현실적으로 판매가격을 제대로 알고 사기가 어려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가 공개한 상반기 다소비 일반 의약품 50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에 따르면 Y사 소화제(10알)의 경우 광산구의 한 약국에서 840원인 반면 동구에서는 2천원으로 가격차가 2.3배에 달했다. 동구에서 2만4천원에 팔리는 자양강장제 연질캅셀은 북구에서는 8천원이 싼 1만6천원에 불과했다. 특히 50개 의약품 가운데 5개구 평균 판매가격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10~30% 차이가 났다.

같은 약을 두고 지역이나 약국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인 것은 지난 1996년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 때문이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약국의 자금력이나 규모,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지역과 약국의 사정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약품의 경우 대형마트나 동네슈퍼처럼 제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 소비자가 절대로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의 약값 조사도 전체적인 윤곽만 공개할 뿐 개별약국의 가격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장가격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같은 약이 2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일부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않고 저렴한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약국별 가격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약품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비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값 표준화 등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혹투성이 '신정아 파문' 철저히 규명해야

가짜 박사학위 등으로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서 해임된 신정아씨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이 구체적 해명없이 침묵하고 있는데다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공동예술감독 임명과정부터 수수께끼다. 한갑수 광주비엔날레재단 전 이사장은 신씨가 예술감독에 선임될 당시 장윤 스님으로부터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는데 학위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며 신씨를 두둔하는 듯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장윤 스님은 부인하고 나섰지만 '배후설'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신씨를 추천한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씨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추천서에 연령, 주소, 현직 등의 기록이 전혀 없고 학력도 '예일대학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공동예술감독 선정 소위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기본적 사항조차 몰랐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신씨는 심사위원 11명 중 1표만 얻었는데도 공동예술감독에 선임됐다. 재단측은 후보자들이 고사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됐다고 해명했지만 100억원이나 투입되는 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신씨를 낙점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한갑수 전 이사장 등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동국대교수 임용과정도 의문투성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배후로 거론되고 있고 여권의 다른 실세가 지목되기도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외압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의혹을 방치하면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등 신씨와 관련된 당사자들도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잘못이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최용수

'개미'들의 화이트 아웃 (White Out)

제7의 대륙으로 불리는 남극!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도 식힐 겸 남극 탐험을 떠나보자. 남극 대륙은 면적이 약 1,400만㎢로 오세아니아 대륙보다도 넓으며, 전 세계 민물의 70%가 무공해 빙하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등 지하자원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가치를 측량하기조차 힘들다 한다.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남극 연구와 탐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향후 이 무한한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고권을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남극으로의 길에는 혹독한 시련들이 깔려 있다. 우선,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20℃를 밑돌며 한겨울에는 생체 조직이 즉시 결빙되는 영하 80℃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에 더하여 초속 14m 이상의 블리자드(blizzard)가 불면 가시거리가 150m 이하로 떨어지는 데다 날카로운 얼음조각들이 총알처럼 탐험대를 덮쳐온다. 블리자드를 벗어나더라도 발밑이 갑자기 꺼지며 낭떠러지로 둔갑하는 크레바스(crevasse), 즉 빙하 협곡의 위협을 조심해야 한다. 크레바스를 돌고 돌아 목표 지점인 산 밑에 도달하면 갑자기 산이 저 멀리로 후퇴해 버린다. 지표의 공기와 공중의 공기 간의 온도 및 밀도 차로 인해 수백 리 밖의 산이 가까이 보이는 신기루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남극 탐험의 애로 중 백미는 물체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갑자기 눈앞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화이트 아웃(white out), 즉 백시(白視)현상이다. 남극의 얼음 벌판과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난반사를 되풀이함에 따라, 분명 빛은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기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화이트 아웃에 빠져들면 방향감각은 물론 평형감각마저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나침반과 지도를 판독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줄 모르면 그대로 미아가 되어 버린다.

어찌 보면 우리 서민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행태가 남극 탐험과 많이 닮았다. 옆집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느니 하는 소문에 혹하여 유망하다고 하는 주식에 투자하였더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외국인 매도공세라는 블리자드가 불고, 용케 버티고 나니 시장 주도주들의 기업실적 악화라는 크레바스가 발목을 잡고, 그래도 보유 주식 발행 기업의 외자유치 소문에 끝까지 버티고 나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외자유치가 신기루로 사라져 버리고, 이쯤 되면 눈앞이 하얘지면서 본전이라도 건지자는 일념으로 이리저리 사고팔기를 거듭하다가 빚까지 지기 일쑤이고…

남극은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력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탐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에게만 그 무한한 매력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우리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남극 탐험에 실패했다고 하늘만 원망하는 탐험가와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정부와 시장만을 탓하는 투자가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금감원 광주지원장·2007년 5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독자마당

바다낚시 어선 구명조끼 규격·요건 철저 감독을

낚시를 좋아해 한달에 한두번씩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간다.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것이 늘 버릇이 됐다.

하지만 어선에 탈때마다 이 구명조끼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구명조끼가 규격에 미달되는 싸구려도 많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 구명 조끼 규격이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 아이에게 입히기에 무리가 많다.

해상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이용하는 구명조끼는 85㎏의 철편을 24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부력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야간 표시등, 귀마개솜, 예비끈, 호루라기까지 갖춰야 제대로 된 구명조끼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해든 서해든 바다낚시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수준의 구명조끼는 거의 없다. 그저 동네 할인점에서 파는 스티로폼만 들어간 구명조끼가 대부분이다.

이제 한국인의 체형이 날로 서구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구명조끼로는 너무나 빈약하다.

실제 현실에 잘 맞지 않고 해상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장담키 어렵다.

인명구조용으로 만들어진 구명조끼라면 이같은 규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춰서 만들고 또한 어선들이 그런 조끼를 갖췄는지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상·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건물 비상구에 물건 적치, 대형 인명피해 부른다

최근 경기도 한 영화관에서 비상구가 폐쇄되면서 관람객 수백명이 출구를 찾아 헤매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인터넷 동영상과 뉴스를 본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건물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상시 개방하고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건물 비상구들은 물건들을 쌓아놓거나 방범 등을 이유로 폐쇄된 곳들이 많아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비상구는 일반 통로처럼 자주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화재 등 비상시 사용하는 통로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치 물건을 쌓는 행위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전 불감증에 푹 빠져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비상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생명의 통로인 만큼 폐쇄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한다.

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확보한 뒤 관할구역의 소방관서에 신고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광수· 나주 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농촌 빈집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활용을

농촌에는 빈집이 많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힘에 부쳐 농사를 못 짓는 경우 혹은 농촌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사망하면서 도시 지역에 사는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면서 농가 빈집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볼 때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또 오랜 시간동안 무단 방치되어 결국 폐가나 흉가로 전락하는 빈 농가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방치된 빈 집을 재활용해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재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우선 전남도 지역의 쓸만한 농촌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도농 교류형, 회원제 콘도 등 다양한 유형별로 고치는 것이다. 지역별·유형별로 구축한 뒤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많은 이들이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예산이 없다고 무작정 내버려둬서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김태민·광주시 북구 용봉동

농촌 노인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처벌 대상

농촌 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 집집마다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인 노인들의 경우 면허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니 사고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4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로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4륜 오토바이가 2륜 오토바이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노인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2륜이건 4륜이건 배기량의 구분에 의한 해당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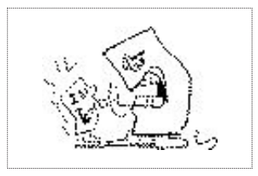
이렇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호용·곡성경찰서 원양파출소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특허괴물'



국내 기업들에 '특허괴물' 비상이 걸렸다. 특허괴물은 생산시설 및 영업망을 두지 않고 발명가와 기술자, 변호사를 채용해 특허를 둘러싼 소송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을 말한다.

2000년 이후 모습을 드러낸 특허괴물은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특히 IT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소송에서 승리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고, 국내 특허출원건수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인터디지탈사는 지난 2005년 노키아를 필두로 파나소닉, 삼성과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차례로 거액의 로열티 지급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LG전자, 팬택 등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했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LG전자는 미리 로열티 지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회사는 세계적으로 현재 8개사. 이들은 특허를 다량 출원해 기술 그물을 만들거나 폐업한 회사, 발명가 등을 통해 특허를 헐값에 사들여 공격 무기로 활용한다. 못쓰게 된 특허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원래 특허제도는 발명가에게 일종의 독점 인센티브를 부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혁신 촉진으로 사회적 이익(발전)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게 본 취지이다.

하지만 21세기들어 악용되고 있다. IT 분야의 기술은 복잡하고 융합적이다. 따라서 미세한 부분까지 특허로 따져 걸고 넘어지면 걸리지 않을 데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허괴물은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 본격 돈벌이로 삼고 나선 것이다. 혁신을 촉진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특허제도가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꼴이다.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는, 이른바 특허 풀(pool)이란 수단없이는 그 누구도 혁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특허괴물 스스로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이대로 가다간 특허괴물을 규제할 별도의 법이 생겨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